No. 88

IIRI Online Series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김성한(고려대),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김현욱(국립외교원), 정성윤(통일연구원)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우정엽(세종연구소)

2021. 6. 4

일민국제관계연구원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2021 일민외교안보포럼(IFIAS)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 일시: 2021년 5월 25-31일
○ 형식: 서면 대담
○ 참석자

김성한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 한·미 정상회담 평가

■ 김성한: 지난 21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는 ABC(Alliance, Beyond, Comprehensive)로 상징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동맹(Alliance)의 가치가 복원되었고, 다양한 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력 제공과 전작권 전환 등 기존의 약속들을 재확인하였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인식, 목표, 대상, 방법을 합의하고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점은 한국의 안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협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동맹의 역할 범주를 한반도 너머로(Beyond) 확장하기로 약속한 점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새로운 도전(new chapter)의 장으로 아세안(ASEAN)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지역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하며 쿼드(Quad)를 예로 들고,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등 국제법 존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한·미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전략연합(global strategic coalition)' 성격의 가치 동맹으로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협력 분야가 포괄적(Comprehensive)으로 확장된 것 또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양국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등 당면한 지구적 현안 뿐 아니라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인적 교류, 인간안보 등 다양한 미래 이슈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공동선언문의 절반 이상을 비전통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협력 이슈에 할애한 것은 예전 정상회담과는 분명 차별적인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의제들 대부분에서 한국의 실질적 역할과 기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상호 호혜적 동맹 관계 구축과 한국의 국익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중 경쟁구도에서 모호성을 유지했던 기존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외교의 외연을 확대한 것은 매우 바

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한 것, 한·미동맹에서 중국과 관련된 이슈를 협의 및 합의한 것은 매우 적극적인 외교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미동맹은 2008년 포괄적 전략동맹화에 합의한 바 있는데, 실질적인 발전은 미미했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중국을 의식하여 별 성과가 없었으며, 글로벌 측면에서도 구색만 갖추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관련하여 쿼드(Quad)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기로 약속하였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후변화, 백신 이외에도 6G,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부분도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우정엽

이번 정상회담은 공동선언문과 회담을 전후한 메시징(messaging)을 구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동선언문은 그 어느 때 보다 동맹의 역할을 강화하고 양국의 의견이 일치한 모습을 보여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이 트럼프 정부 시절 방위비 문제와 미·북 회담에 집중하여 논의했던 것과는 달리, 동맹의 역할을 보다 넓게 규정하고 그러한 동맹의 역할에 양국이 합의(commit)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동맹의 관계가 강하게 복원되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의 '2+2 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물론 미·일회담의 공동선언문과는 차이가 있으나) 한국이 지정학적 고려를 하였을 때 거의 최대 수준으로 공동선언문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전후한 메시징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 회담이 한·미 양자가 백신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 된 부분입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백신 지원을 받을 수준의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신 스왑(swap) 등의 이야기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이 이번 회담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 되었고, 이번 회담 결과로 백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계속하여 거론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신범철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미·중 전략경쟁의 다양한 이슈에서 미국의 편에 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 국방, 외교, 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이 한 차원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남북관계나 한·중관계의 충격도 존재할 것이고, 44조 원의 대미 투자에도 확보한 백신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미사일지침 폐지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차두현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인식이 상당 부분 일치함을 부각한 것도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 내용 중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는 표현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 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는 부분은 논란이 되었던 비핵화 표현에 대해 한국의 해석을 수용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핵프로그램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표현을 통해 북한의 성실한 비핵화 조치가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위한 요건임을 밝혔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한다고 천명하였는데, 이는 기존 남북 간, 미·북 간 합의의 유효성을 부각함으로써 북한의 대화 복귀를 공동 촉구한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의미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는 표현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한·미 공동성명의 가장 큰 의의는 그동안 동맹과 관련하여 한국이 가지고 있던 '한반도 방위동맹'에 대한 사고의 고착을 탈피하였다는 점일 것입니다. '21세기 전략동맹'을 반복해서 외치면서도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한반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사적으로나마 이를 탈피하였다는 점이 동맹의 미래를 밝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미·중관계와 한·미동맹

■ **김성한: 문재인 정부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취해 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쪽으로 많이 다가간 모양새인데, 이러한 급선회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차두현**

일단 미국 측이 한·미가 이견을 보인다는 인상을 회피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대외전략적인 가치를 한국 역시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양분법적인 도식에서 탈피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미는 '동맹' 관계입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무역 분야를 넘어 과학기술 및 여타 분야로 확장되고 있고, 가치와 체제에 대한 영역을 다루기 시작한 마당에 한국 역시 자기의 정체성(identity)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외교상의 일종의 공중증(恐中症)에 빠져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즉, 중국으로부터의 보복 우려에 너무 무게를 두었는데,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을 때 접근의 유인이 더 커집니다. 한국이 너무 미국 일변도로 기우는 것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중 간에 이견이 있더라도 이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양국 입장을 조정하는 자세가 되어야 중국 역시 한국의 예측 가능성을 높게 볼 것이고, 이것이 상호 존중의 한·중관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 임했다면 가장 최선이고, 국내 일부에서 지적하는 대로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고려해 나머지 면에서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어떠한 대북 양보나 보상도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각론 부분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정엽**

지난 3월 '2+2 회담'에서 나온 선언문이나 그 후의 정부의 설명, 그리고 '2+2 회담' 이후 정상회담까지 특별한 외교적 이벤트가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2+2' 당시의 공동선언문과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문이 미국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보는 것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나, 한국의 의도가 어

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국이 원하는 부분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결과물이 공동선언문에 명기되도록 한다는 데에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이번 공동선언문에 사용된 단어들은 아마도 북한 부분에서 한국이 원하는 단어 사용 그리고 중국 부분에서 미국이 원하는 단어 사용이 교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동선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입장은 확인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지만, 공동선언문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정책으로 구현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바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한·미 간 정책 공조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성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균형외교는 미·중 간 갈등 심화라는 구조적 요인과 한국의 국력 역부족이라는 현실적 요인에 의해 긍정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략적 위치선정(positioning)에 따라 한·미 및 한·중관계가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작동되면서, 두 강대국 모두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전략적 관심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한 배경에는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고심이 작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임기 1년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이러한 입장표명의 주요 배경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해 비핵화 실천조치를 강행해야 할 뿐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총화와 지지 또한 필요한데, 결국 미국과의 공조 강화 이외에 현실적으로 뾰족한 해법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과감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현욱

우선 '균형외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중 간 균형외교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중국 대륙에 맞닿아있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시간과 비례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미동맹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균형외교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강화가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 방향의 급선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것에 대해 양보해야 합니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초기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북제재를 강조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깡패(thug)'라고 부르던 기조에서 현재는 외교 쪽에 더욱더 방점을 찍고 있으며, 외교의 구체적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미·중경쟁이 격해지면서 외교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경쟁이 느슨할 경우, 한국의 외교적 공간은 나름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이나 향후에 미·중경쟁이 격하게 전개될 경우, 한국의 외교적 공간은 매우 작아질 것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싱가포르나 호주와 다르고, 한국은 미·중 간 초월적 외교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외교적 공간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외교적 타개책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 신범철

급선회의 배경은 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공동성명 본문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요청하는 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북한 인권 문제는 물론이고 쿼드(Quad)와 대만해협 문제를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포함시킴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에 권위를 부여하고, 김 위원장을 지속적으로 대화에 관여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성명은) 판문점과 싱가포르 선언만이 언급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기존의 남북, 미·북 간 모든 합의를 의미한 것이기에 그 의미는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남북 및 미·북관계 전망

■ 김성한: 향후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 신범철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은 한·미관계 또는 북한 문제에 대한 방향성뿐입니다. 구체적인 협력은 앞으로 하나씩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평가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제재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력갱생의 성과를 보아가면서 대화에 복귀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마음이 급해 보이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조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유연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지만, 제재를 양보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장 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여부에 따라 대화 재개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정성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화와 관여',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 '기존 합의에 기초',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등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운 '적대시 정책의 철회'로 판단할지 의문입니다. 북한이 의미하는 적대시 정책의 요체가 제재, 인권, 군사위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지침의 폐기와 한·미·일 3국 협력 강조에 주목하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 부재에 실망한다면, 당분간 북·미관계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사 한·미 정상의 기대대로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고 정세가 호전되더라도 상황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나 협상 대상의 등가성과 가역성 극복을 위한 방안에 관련국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항상 그랬듯이 북한은 핵능력 증강을 통한 대미 강제 전략을 채택하려 할 것입니다. 10년 전 부시-오바마 행정부 교체기에 미·북관계가 고위급 회담과 2.29 합의 등으로 지금보다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3호 발사(2012.4),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2012.5), 은하 3호 발사(2012.12), 3차 핵실험(2013.2),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2013.3), 5MW 원자로 재가동(2013.4) 등 북한은 타협이 아닌 '핵 강압'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관여를 강조하지만, 북한이 타협을 거부하고 핵능력 증강을 위한 도발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언제든 '조정되고 실질적인' 억지와 강압을 선택해 북한의 의도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거부하고자 할 것입니다.

■ 차두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미 4월 29일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나타난 대로 '일괄타결(grand bargain)'도, '전략적 인내'도 아닌 중간 지점의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지만, 일거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교에 무게를 두는 속성상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외교를 통해 우선 실무 선에서 먼저 문제를 풀어나가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실무 선에서의 일괄타결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우선은 북한 핵이 미 본토에 주는 위협을 차단하고 이후의 상황 진전에 따라 더 큰 목표(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최종 단계로 설정하되, 우선 '영변+α의 동결 → 부분 신고 → 제한적 사찰 및 검증'을 거친 후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약'이라는 절차를 밟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몇 가지 인센티브(제재 완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미·북관계 개선 조치 등)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정책이 '어정쩡한 타협'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에 대해 바이든 정부도 우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동결을 목표로 대화를 재개하고, 단계적 접근을 취할 경우, 확실한 비핵화를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도 오히려 기존의 국제제재는 완화·해제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 비확산체제를 위태롭게 하고, 미-이란 핵협상에도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를 비판했으면서도 트럼프보다 더 많은 대북 양보를 했다는 공화당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협상에 다시 끌어들이지만, 과도한 보상을 대안으로 제기하지는 않으며 당분간 기존 수준의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외교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먼저 입장을 바꾸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 나타난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과의 협상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시간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단계적 접근을 취하되, 미국이 조급해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세 가지의 키워드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회담 결과에 대한 침묵으로 나타나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절연(insulation)'인데, 선제적으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초조감을 촉발하자는 접근입니다. 두 번째는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through)'입니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건재하며, 오히려 핵능력은 발전되고 있다는 인

상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사회 내에서 대북제재 무용론, 북핵 동결선에서의 만족론을 유발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시위(tailored demonstration)'입니다. 핵/장거리미사일 모라토리엄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핵능력을 시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미·북관계는 당장은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 미·북 정상회담의 재개와 같은 급격한 상황 진전은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가 먼저 초조해지고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희망적 관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에 대한 맞춤형 능력시위의 측면에서 대남 도발을 북한이 적절히 활용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남북한 관계에 관한 한 자신들이 주도권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깨지 않고는 남북관계의 진전 역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상회담 후의 공동선언에서 코백스(COVAX)를 통한 백신 공유의 여지가 확장되었으므로 12월경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다시 강력히 제안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김현욱

향후 남북관계는 일단 북·미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두고 보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를 강조하고 있고, 단계적 협상, 스몰딜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싱가포르 합의 내용까지 포함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실무협상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으로서는 실무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물밑으로 한·미 간에 많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북·미 양측에 어떤 것을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대충 맞아떨어지고 난 후에 실무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런 청사진 없는 실무협상은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일단 판문점 선언을 수용한 것으로 독자성이 인정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대북제재에 걸리는 사안들이 없으며, 따라서 북한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행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 우정엽

이번 공동선언문에서는 미·일 공동선언문에서 사용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싱가포르 합의 및 판문점 합의 등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보다 유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동선언문에 북한의 인권을 언급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원칙적 입장은 여전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2017년 문재인-트럼프 회담 당시 나왔던 공동선언문과 비교하면 이번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은 훨씬 강도가 낮은 원칙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공동선언문에 표현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공동선언문이 미·북 간 또는 남·북 간 관계 진전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회의적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 이후 인터뷰에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러한 문구상의 양보 이외에 실질적인 선제 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그것은 북한이 주장해 온 셈법의 변화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공동선언문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미·북 및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4) 과학기술 동맹 가능성

■ **김성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 한·미동맹의 외연이 확장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양국 간 군사동맹에 더해 한·미 하이테크(high-tech)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우정엽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사이에서 아직 최상위(first tier) 동맹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무기 개발이나 정보(intelligence) 협조 부문에 있어서 아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협력의 주체(정부 간 협력인지 민간 기업 간 협력인지) 그리고 협력이 어떠한 형태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은 미국 원천 기술을 사용한 물자의 수출 통제 등을 통해 한국이 첨단 기술 물자를 제3국과 거래하는 데에 제약을 둘 수 있습니다. 화웨이(Huawei)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간 기술동맹은 단순히 정부 간 기술을 협조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민간 기업의 활동 영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이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부정적 유인(negative incentive), 즉 제재(sanction)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국들을 이끌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긍정적 유인(positive incentive)이 가능할 것인지 미국과 정책적으로 협조 방안을 이끌어 내야 실질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하이테크 동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범철

이 분야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이행까지 염두에 두고 서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므로 일단 방향성에서 합의하고, 이행은 다음 정부의 과제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하이테크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는 한국의 차기 행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이테크 동맹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높은데, 한국의 차기 정부가 민주당에서 구성되면 중국을 고려한 속도조절이 예상되기에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정성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안보적·포괄적 미래 이슈들은 우리에게 한·미관계를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 진화해야 하는 필요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ICT,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한·미관계가 하이테크 동맹의 성격으로 진화한다면 국익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 관련 부문에 대한 미국의 민감성과 취약성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면, 동맹국 간 상호의존성이 지금보다 분명 강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력 강화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그 의지에 대한 한국의 신뢰 또한 동반 상승될 것입니다. 이는 곧 미래 산업 협력의 공고화와 한반도의 평화 사이의 선순환이 구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필요성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의존 수준이 높아지거나 동맹의 성격 자체가 급격히 변할 것이라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문제와 북핵 문제를 고려할 때 외교안보적 차원에서의 동맹의 가치와 역할이 여전히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 각각에게 비안보·포괄적 미래 이슈 영역은 굳이 상대가 아니더라도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이 출현하거나, 자체 능력의 신장으로 취약성이 극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안보 이슈가 현존하는 한, 한·미관계는 군사동맹의 성격을 유지한 채 양국의 필요에 의해 미래 이슈에 관한 협력 자원이 탄력적으로 교환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차두현

과학기술 분야는 정부 간의 선언만으로 모든 협력이 규정되기는 힘든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영역 특히 기업들이 같이 관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클린네트워크(Clean-Network)' 관련 협력이라든지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의 여지가 확장된 것은 분명합니다.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한·미 협력은 군사적 차원에서 지니는 파급영향 역시 결코 작지 않습니다. 동맹 간의 결속과 단합이 격상되면 결국은 군사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협력 역시 중요해지는데, 동맹국의 과학기술 보호나 표준에 대한 시각이 다르면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측면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협력을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동맹국에게 공유된 기술이 경쟁국이나 잠재적국에게 유출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결국 기술보안에 대한 협력과 밀접히 연계되며, 이러한 점에서 미래 하이테크 동맹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이 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 역시 우리에게는 고무적인 것입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 국가들이 '우주군'의 창설 등 우주 영역을 안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우리는 여전히 이에 대해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은 우리에게 상당한 혜택을 안겨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김현욱

정상회담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한·미 간 실질적 협력 강화입니다. 바

이든 정부가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첨단산업 부문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이 부분에서 한·미 양국은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서, 대체할 수 있는 동맹국이 없어 보입니다.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생산능력 등에서 한국은 가장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향후 미국 내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의 시장 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열렸던 쿼드(Quad) 정상회담이나 미·일 정상회담보다 더욱더 중요한 하이테크 동맹으로 거듭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국 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나, 실제 기업체들은 기업의 이윤에 따라 움직이게 되며, 이미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관련 시안 공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과 미국 기술을 지향한 쌍방향 투자의 결과였다고 보여집니다.

(5) 한·중관계 전망

■ 김성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남중국해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24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한·중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 김현욱

한·중관계에서 중국이 불쾌감을 전혀 갖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미·중 간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레드라인(red line)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으로써는 약간의 불쾌감을 가질 정도의 조치이고, 매우 미미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주중 한국대사 초치와 같은 조치조차 없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군사협력은 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으며, 만일 한다면 중국도 경제보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 협력에 있어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많은 성과를 보였다고 사료됩니다.

사실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제사회로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며,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는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중국은 자국 영토라고 임의로 주장하는 해역에서 인공섬을 자의대로 건설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렇게 국제규범을 자

의대로 위반하는 국가가 내정간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유지'는 이미 왕이 장관이 CFR 좌담에서 언급한 용어입니다. 향후 한·중관계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관리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우정엽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한 언급이 공동선언에 들어간 것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공동선언문에 담긴 표현은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인데, 내용(context)에는 차이가 있으나, 왕이 외교부장이 CFR에서 사용한 "Adhering to the one-China principle, opposing Taiwan independence, and safeguard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is also in the strategic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oo."라는 문구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대만해협이라는 문제로 비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 비난할 명분은 약하나 미국의 의도에 대해 불만이 있는 만큼 다른 외교적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부임한 주중 북한대사와 왕이 부장이 만나는 모습을 공개한 것 등과 같은 외교적 행위, 저차원의 제재 위반을 통한 북한 경제 지원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범철

한꺼번에 너무도 많은 것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중국해에 관한 언급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만해협은 중국으로서는 레드라인으로 여겨왔던 영역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쿼드(Quad)가 언급된 이상 대만해협은 다음 정부를 위해 아껴두는 편이 나았을 것으로 봅니다.

한·중관계는 튼튼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전개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한·중관계는 중국 주도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부당한 압박을 거부하며, 한·중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외교적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 정성윤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포함된 것은, 한국이 쿼드(Quad)에 비록 형식적으로는 동참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외교적 선언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대해 모호한 자세를 유지해 왔던 역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상당히 급진전된 언급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이에 대한 한국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를 위해 전술적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 및 동맹 전략의 대전환을 기획한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미·중 경쟁관계에서 한국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번 성명의 내용을 한·미동맹의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ing)'로 해석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한국의 전략 전환을 대비해, 미국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관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책을 고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견지는 본질적으로 양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가 존재하는 한, 한·중 안보협력은 한계가 있고, 미·중 경쟁관계와 한·미동맹이 병존하는 한, 한·중 외교협력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한국은 한·중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국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일관되게 중국에 전달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한국에 대한 헛된 기대를 품지 않도록 만들고 한·중관계에도 거품이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국의 미래에 궁극적으로 이로울 것입니다. 둘째, 중국과의 공통된 이익을 확장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국은 당분간 지속적인 국력 배양과 안정적인 대외환경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셋째, 중국과의 호혜적 관계 유지, 한국의 대중 외교안보적 부담 경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책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상호의존 수준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도와 아세안(ASEAN)에 대한 전략적 관심과 관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두현

우리가 현 단계에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보복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대외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국

제적 이슈들에 있어서 한·미가 같은 길을 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지금은 대만 문제만 부각되어 있지만,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미얀마에서의 조속한 민주주의 복귀, 인권과 법치의 원칙 존중, 반도체 및 통신 등 과학기술, 우주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개혁 등이 모두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우리가 한·미 공동성명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미국으로부터는 신뢰를, 중국으로부터는 존중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그러한 일부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우리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공동성명의 내용이 '원론적인 것'이라고 평가를 절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공동성명에 나타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언급도 나타났습니다. *Global Times*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이를 마치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다시 입장을 조정하는 듯한 논조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중국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부터 한·중 간에는 한·미 간의 약속과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악의 대응입니다. 오히려, 당장은 대만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한·미 공동선언의 내용 중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한·미 협력방향과 한·중 간의 의견 조율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한·미관계도 그랬지만, 이제는 중국과도 적절한 '갈등관리'를 연습해 나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6) 정상회담 후속조치

■ 김성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기술, 백신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속성(sustainability)을 갖기 위해 후속 조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 차두현

첫째, 평화와 동맹의 이분법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대처하는 것 이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변함없는 주도권을 보장하는 자산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자주' 집착으로부터도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은 어떠한 측면에서 분명히 행동의 자율성을 제약합니다. 그러나 동맹의 구성 자체가 안전의 보장을 위해 자율성의 일부를 희생하면서 출발한 것입

니다. 완전한 '자주'가 실현된 국가는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동맹의 미래와 관련해서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의 역할 및 기능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동맹이 기여해 나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중국 등 일부 주변국들의 경계심에 대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는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즉, 동맹을 활용하여 분쟁을 하기보다는 평화로운 협의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길을 지향한다면 일부 주변국 역시 이를 위협적으로 볼 논리가 빈약해질 것입니다. 기술, 백신, 신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동맹이 누구를 위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확장해 나간다는 논리를 강화해 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공동성명의 각론(各論)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자체의 비전과 방안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욱

한·미 정상회담의 대부분 협력의제는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업체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술, 그린산업, 백신 등은 이미 기업체들 간의 투자 및 협력 의제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관여 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쿼드(Quad) 국가들과 이런 협력 의제를 확대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주도적인 협력 의제를 다양한 국가들로 확대하여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점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방향성인데, 이번 정상회담 성명으로 보면 한국의 대외정책 및 동맹정책의 방향성에 큰 변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항행 및 비행의 자유, 쿼드(Quad)의 인정, 대만해협의 평화 및 안정 등은 과거 한국의 지역정책과 비교해서 매우 전향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환에 대해 추후 미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우정엽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백신 협력 등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모두 정부가 민간 업체에 계약을 강제할 수 없고, 지적재산권 이양 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어떠한 공식적 언급이나 문서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미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볼 것입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의 내용에 어느 정도 배치되는 내용을 한·중 간 공식 문서, 혹은 공식 대화에 담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 미국이 원하는 구체적 행동의 강도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이 한·미 연합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미국군과 의회 차원에서 한·미 연합군 준비태세 확인 등을 위한 훈련 재개의 여론이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재개 요구에 한국이 어떠한 명분으로 훈련을 거부하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 신범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합의된 다양한 의제를 점검하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외교부에서 국방부에서 그리고 경제 부처에서 합의사항 이행 테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고 항목별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된 추진이 가능하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차원의 주기적인 검토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진전이 없는 공허한 정상회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점검함으로써 정상회담의 내용이 실무진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성윤

협력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 다자적 제도의 적극 활용입니다. 다자적 제도는 구조적 차원에서 국가 간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 사항 중 글로벌 공공재에 해당하는 기후변화, 백신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는 양국이 기존 국제레짐과 제도의 역할 강화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과 절차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글로벌 제도와 규범의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사이버 안보와 미래 에너지 분야는 국제 표준 제도와 규범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양국이 국제레짐 형성을 적극 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국익과 미래가 반영된 국제 제도 형성을 적극 추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 성과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미 공동의 개발협력 노력, 교환 프로그램 등의 인적 교류 확대, 인간안보에 대한 정치적 유대 강화 등은 정치권의 조치와 양국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비교적 신속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 세대들은 양국 협력의 미래에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협력에 대한 기대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